

김한길 “대표직 걸겠다” 배수의 진… 초강경 對與투쟁 예고

새누리 단독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반발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오늘 제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29일 “직을 걸고 싸우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며 초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전날 이뤄진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단독처리에 반발,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선언한 데 이어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하루 이틀 보이콧한다는 계산을 한다면 착오”라며 “많은 의원들이 국회 정상화를 바라겠지만 비상한 시기이니만큼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민병두 전략총보본부장이 전했다.

그는 트위터에 “국민께 송구한 줄 알면서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의회주의자를 자임해온 김 대표가 강경파에 휘둘린다는 비난을 각오하면서까지 ‘출구 없는 투쟁’을 선언한 것은 엄중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일사불란한 대오를 유지함으로써 대어 압박효과를 높여려는 ‘내부 단속속’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대표는 임명안 강행처리 후 당내 여진을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적진분열로 치달으면서 대어투쟁의 동력만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일원인 신경민 최고위원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며 원내 지도부를 겨냥하는 가 하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경태, 우원식 최고위원이 또 한 차례 설전을 벌이는 등 당내 갈등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날 의총 비공개 부분에서도 원내 지도부 비판론이 계속 고개를 드는 등 향후 대어 전략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한정에 의원 등은 보이콧에 따른 여론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고,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지리멸렬, 오합지졸의 위기상황으로, 제대로 된 전술이 없다”며 “의원이 된 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참담함, 미안함, 죄송함 등으로 한숨 도 못 자겠다”며 “멘붕(멘탈 붕괴)만 말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김 대표가 “직을 걸겠다”는 말로 총대를 메며 상황을 정리하는 것으로 의총은 마무리됐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단일대오로 뭉쳐 지도부에게 힘을 모아주고 구체적 대응방법도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징한 강창희 국회의장을 정조준, 2일 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앞서 의총에서는 강 의장의 사회권 거부와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제기, 침묵 시위 등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으며, 전 원내대표는 오후 강 의장을 향의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2일 정책의총을 여는 것을 비롯, 정책위 및 상임위법 활동을 자체 가동하며 민생문제에 대한 자체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인해 민생을 외면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그러나 김 대표로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 고민이다. 민주당은 ‘양북(특급·특위) 요구 관철 의지도 불태우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특급에 대해 거부 입장이 확보부동하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공동 특검법안 만든다

민주당·정의당·안철수·시민사회단체...이르면 주내 발의

대선개입·대화록 유출 등 망라...재판진행중 사안은 제외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시민사회단체 등 야권은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공동안을 마련,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병계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 공청회’에서 특검법안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에서는 수사 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건처, 안행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동등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등 그 밖의 의혹을 수사 범위에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포털·새누리당 연계 의혹 등 국정원 관련 잔여 수사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국군사서비서령부-국정원-새누리당

연계 의혹 ▲‘십일달단’ 활동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DVD ▲안행부의 보수편향 자료배포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서상기·김무성·정문헌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도 ‘비밀공개’에 해당할 수사범위로 삼았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미 기소가 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트위터 작성 의혹 등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도 검찰이 기소할 경우 수사에서 제외된다.

특검 기한은 60일로 잡았으나 시간이 부족할 때는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 임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 협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보

는 3명을 두기로 했으며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정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직무수행에 현저하 곤란한 결여사항이 없는 이상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부당하게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이 필요할 때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정원법 17조 및 23조는 이번 수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 같은 법안을 기초로 세 부 검토작업을 거친 뒤 당론으로 결정하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박병계 의원은 “각당의 뜻이 많이 모아진 상태”라며 “이르면 다음주에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5대 종단 대표 5일 시국선언

“박창신 신부 수사는 종교탄압” 규정...박대통령 사과 요구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 등 광주지역 5대 종단이 오는 5일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강론 참석을 이 반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광주지역 5대 종단 대표들은 지난 2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선덕사에서 모임을 하고 오는 5일 오후 2시 광주YMCA에서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성 광주시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와 원복 주지 스

님, 이정택 원불교광주전남교구장, 김명섭 신부 등이 참석했으며 천도교는 위임했다.

종단 대표들은 모임에서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 강론에 대한 정부의 수사 지시가 명백한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에는 종단별로 20여 명씩 모두 1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김용성 목사는 “신부님의 강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인데 정권이 사상적으로 검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거나 정권과 이해관계가 다르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5대 종단은 시국 선언 이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한편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소속 교무 30여명은 지난 29일 전북 익산

시 원불교 중앙총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거짓이 관을 치고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종교인의 양심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다시 한 번 우리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교무들은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진다”는 소태산 대종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자 전원의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사회개혁교무단에는 원불교 전체 교무 1600여명 중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여 ‘로또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착수

새누리당이 내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나 인물이 아니라 투표용지 기재 순서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좌우되는 이른바 ‘로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나 추천을 받지 않기에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만 기재되는데 많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재된 순서를 정당 기호로 착각,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최우선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선거법을 개정,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현행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발표하는 방법

이 거론된다. 교육감 후보 출마자격에 ‘교육 경력 5년’ 규정을 다시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연방뉴스

진보당 의원, 24일만에 단식농성 풀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선 판정구에 항의해 단식농성에 벌여온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9일 24일만에 단식농성을 풀었다.

김신동 오병윤 의원은 이날 농성중인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회의와 민주전 지도부,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단, 저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단식농단을 호소하셔서 그 분들의 사랑과 뜻을 받들어 단식을 중단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은 정부의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조치에 반발, 지난 6일 ‘사법투쟁’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김미희 의원이 지난 20일, 김재연 의원이 21일, 이상규 의원이 28일에 탈진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김 의원과 오 의원은 이날까지 24일째 단식농성을 계속해왔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Contains multiple rows of real estate auction detail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Contains multiple rows of real estate auction detail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비고. Contains multiple rows of real estate auction details.